

公共支出模型의 比較分析—韓・美의 大學教育을 중심으로 : 論評

李 俊 求*

大學教育에 관한 公共支出模型을 가지고 大學教育의 需要와 供給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金教授의 論文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¹⁾ 그중 몇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우선 大學教育에 관한 公共支出決定에 있어 需要와 供給의 측면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는 價格에 대해서 彈力的이라고 한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도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價格에 대한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金教授 자신의 평가도 그렇듯이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관찰은 한국에서의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가 價格的인 요인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을 내리게끔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제될 수 있는 것은 大學教育과 관련된 「價格」이란 개념이다. 金教授는 大學教育을 公共財로 볼 때 그 價格은 授業料를 포함한 租稅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그렇다면 住民들이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를 형성할 때 大學教育과 관련된 租稅負擔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前提하에서 이와같은 均衡模型을 풀어 낸 것인데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들어맞는 말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수 없다. 또한 住民들이 大學教育에 대한 需要를 형성할 때 이를 얻기 위해 치루어야 할 代價를 價格이라 한다면 이에는 분명히 教育을 받음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所得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論文에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價格概念의 애매성은 價格彈力

*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1) 金東建, 「公共支出模型의 比較分析—韓・美의 大學教育을 중심으로」, 『經濟學研究』, 제32집(1984. 12), pp. 1~22.

2) 여기서 金教授가 의미하는 바의 「公共財로서의 大學教育」은 대학교육이 새무엘슨이 정의한 「純粹公共財」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그랬다고 보다는 公共部門에서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에 대한 결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보다 명백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論文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大學教育을 위한 公共支出의 額數(E)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大學教育의 量(Q)과 大學教育의 價格(P)과의 곱으로 파악함으로써 大學教育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을 행할 수 있는지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金教授와는 다른 視覺에서 公共支出을 보게 될 때 당연히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金教授는 大學教育을 위한 公共支出의 액수가 결정될 때 住民의 희망과 大學當局의 여건 같은 모든 수급에 관계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均衡을 이루는 상태에서 政府當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의 公共支出의 決定은 이와 같은 合理的인 과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議會 및 行政府내의 복잡한 力學關係 혹은 단순한 慣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地方自治制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못한 한국의 경우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미국처럼 地方自治制가 잘된 곳에서는 각 지방의 독특한 여건에 맞춰 나름대로의 教育豫算이 짜여질 공산이 크다. 또한 수시로 행해지는 住民들의 投票(referendum)에 의해 영향력의 발휘가 가능하므로 이 模型에서와 같은 需給의 요인들이 작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教育豫算이 짜여질 때 어느 지역의 1人當 國民所得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나이構成 등을 고려해서 짜여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大學教育의 量(Q)과 價格(P)의 곱으로서 大學關係 公共支出을 파악하고, 모든 경제주체의 合理性의 추구의 결과로서 公共支出決定過程을 봄으로서 산출해 낸 價格彈力性이 큰 說得力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筆者는 金教授의 回歸分析에서 얻은 높은 R^2 의 값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름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는 筆者가 제기한 의문이 한달 기우에 불과함을 입증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公共支出의 決定過程을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차이에 따라 分析의 결과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 大學教育이라는 公共財의 價格개념이 租稅의 一種에 해당된다는 것은 하나의 定義에 불과할 뿐, 이것이 實證分析의 結果에 끼친 影響은 全無하다. 다만 大學教育의 需要者가 價格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그 價格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한 反應을 나타낸다는 것이 實證분석을 통해 밝혀졌기에, 그렇다면 價格의 一種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授業料(準租稅)引上 等에 教育當局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李教授의 첫번째 지적은 公共財 需要函數속에 내포되어 있는 假定에 대한 의문으로 좁혀진다. 이것은 公共財에 대한 需要가 적절히 表出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데, 적절한 메카니즘만 형성된다면 公共財에 대한 需要表出이 전혀 不可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

그 다음으로 公共支出의 규모가 議會·行政府間의 정치관계로 결정되어지는 만큼 經濟的 合理性에 따른 분석이 얼마큼 의미가 있겠느냐의 지적도 本 論文의 研究目的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公共支出의 適正規模가 政治的 過程속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古典學派는 물론이고 1954年 Samuelson²⁾의 선구자적인 一般均衡分析에서 이미 結論적으로 지적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하여 그以後에 계속 연구되어온 經濟學的 視角에서의 각종 公共支出模型이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 質問에 대한 답변은 筆者가 굳히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本 論文은 公共支出分析을 위한 模型을 이러한 論理를 바탕으로 設定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設定한 模型이 최소한 지금까지 연구된 公共支出模型에서 進一步한 것이 아니겠느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本論文에 관심을 갖고 애써 論評하여 주신 李教授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論評있어 여기에 제시된 模型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 Paul 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November, 1954), pp. 387~389.